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증식·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 사실 아냐” 적극 해명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본인을 둘러싼 재산 증식과 자녀 특혜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등 세비 외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소득이 약 5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추징금 등으로 약 13억원을 지출하고도 소득이 증가했다며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들어온 돈은 정상적인 수준이고, 들어오는 대로 추징금 납부 등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수입 외에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조의금으로 약 1억5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2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장모로부터 생활비로 2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축의금 1억여원은 장모에 모두 건넸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조금씩 분산해 지출했다

‘6억 소득’에 “경조사·출판기념회·장모 생활비 등 세비 외 소득”

자녀 특혜 의혹에 “아빠 찬스 전혀 없다… 본인이 활동한 것”

“칭와대 석사 허위 아냐”… 후원자 오피스텔 제공 의혹엔 “거주 안해”

고 설명할 수 있겠다”며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사들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들어오면 며칠 안으로 추징금을 (그때그때) 다 납부했다”며 연말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산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강모씨 오피스텔에 2년간 주소를 둔 것과 관련해 “외국에 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 소유인 벤처타워에 직계비속까지 주소를 옮겼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해외에 있지 않은 시절에도 강씨 오피스텔에 있었고, 거주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실제 거주한 주소를 내라고 했더니 강씨 주소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거주지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 사무실이 때문”이라며 “거소로 우편물 수령 주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여

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8~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에 전임 신고를 했는데,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받던 시기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임차료를 제대로 안 낸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임명권 등 일 등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 진학 활동 중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후시 원서에 활용됐는 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렸다”며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와 누가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몰랐고”고 말했다. 그는 “그 사안에 대해 질문한 언론들에 해당 해의대학 교수가 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떻게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칭화대가 (학위를) 허위로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규법 국민의힘

의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국회법 29조 1항은 국회의원이라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 역할에 집중하게 되면 입법 활동 등에는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국회의원의 겸직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으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실 보좌진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겸직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은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뉴스1

## 여야, 26일 본회의 열기로… “상임위 양당이 더 협의”

여야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양보를 각각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회동 정례회를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마친 뒤, 우 의장과 다시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우선 추경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돼야 해서 예결위원 명단을 (오는) 26일 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임위(원장)가 5개가 공석이다. 양당이 협의해 26일까지 알려달라 하셨다”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항공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도 논의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다. 26일

본회의서 찰스 랭글 전 미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민주 “추경 처리 위해 이번주 본회의 소집해달라”

국힘 “법사위 재배분 요청… 뿌리는 돈 조정 필요”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만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다만 이날 26일 본회의에서는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추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최대한 신속히 예결위부터 상임위 명단 제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 준비할 생각”이라며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19일

과 전달에도 회동에 나섰으나 견제자를 보이면서 만남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지난 1기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이뤄진 ‘2년 임기’ 원 구성 협상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의정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번 주에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 제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해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언급했다.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일 큰 당면 과제인 정치 회복을 위한 머릿수 정치를 벗어나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 좋은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것부터 국회, 정치 기능이 복원된다”고 했다.

그는 “원내 2당이 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또 추경과 관련해선) 20조원 정도 지출 증액 부분 중에서 13조 원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



김병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당된다. 그 자체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복잡한 정국 속에서 중단됐던 여야 회동도 정례화하고 자주 소통해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를 만들

었으면 한다”며 “현재 국회로 추경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내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당부했다. /뉴스1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Road to Nature, Gurye

구레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레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기업

신한  
하나

기업

고향사랑e을  
바라가기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